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근거 신설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60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7. 25.

다. 회 부 일: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관광 분야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1.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근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7조의9(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u> <u>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발급되며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u> <u>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u>

	<u>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u> <u>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요건, 절차 및 혜택 내용과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다. 검토사항

-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방문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아¹⁾ 숙박·식음·관람·체험·쇼핑 등 5가지 유형의 업체에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주민으로서 지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방문(재방문)을 유도하여 관광소비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사업임.

1) ‘대한민국구석구석’ 웹(<https://korean.visitkorea.or.kr/dgtourcard/>)이나 앱에서 발급

- 해당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고, 1,000여개 이상의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2525년 4월 기준, 44개 지역)

- 강원(8곳) : 평창군, 정선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태백시, 홍천군, 철원군
- 충북(5곳) : 옥천군,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 영동군
- 충남(3곳) : 태안군, 예산군, 보령시
- 인천(1곳) : 강화군
- 경기(2곳) : 연천군, 가평군
- 전북(5곳)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김제시
- 전남(7곳) : 신안군, 영광군, 장흥군, 해남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 경북(6곳) : 고령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청도군, 의성군
- 경남(4곳) :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밀양시
- 부산(3곳) : 영도구, 서구, 동구

- 그런데,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혜택 이용율은 감소하고 있고²⁾, 이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 지역 관광업체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

2)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건수 대비 할인 혜택 등 이용율은 2022년 13.87%, 2023년 6.04%, 2024년 3.12%로 감소하고 있음.

우 사업 시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급 대상 지역 또한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발급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발급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 추진 배경

-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행안부 지정) 대상 지방소멸 위기 대응, 관광을 통한 감소인구 대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증대
- 지역과 방문객 간 유대관계 구축 수단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도입 및 이를 통해 **관광 생활인구*** 지속 유입, **관광소비 확대**

* 생활인구: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 추진 경과

- **(시범사업 및 확대)** 2개 지역(평창, 옥천) 35개 혜택지 참여('22년), 15개 지역 300여개 혜택지 참여('23년) → 참여 규모 8배 성장
- **(신규예산 사업)** 34개 지역 830여개 혜택지 참여('24년), 44개* 지역 1,000여개 혜택지 참여('25년) → 인구감소지역(89개)의 절반 참여
- 44개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25년 4월 기준)

▲(강원) 평창군, 정선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태백시, 홍천군, **철원군**, ▲(충북) 옥천군,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 영동군, ▲(충남) 태안군, 예산군, **보령시**,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김제시**, ▲(전남) 신안군, 영광군, 장흥군, 해남군, **구례군, 곡성군, 합평군**, ▲(경북) 고령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청도군, 의성군**, ▲(경남)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밀양시**, ▲(부산) 영도구, 서구, **동구**

* '25년 신규 지역 붉은 밑줄 글씨

□ 사업 내용

- **(홍보마케팅)** 대국민 홍보캠페인, 지역행사 및 주요거점 연계 홍보 지원 등 이용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통합 홍보마케팅 추진
- **(혜택강화)** 민간·공공 플랫폼 협업 추진 등 혜택처 발굴 확대
 - 혜택지 연계 지역 특화 여행상품 공모전, 민간 플랫폼 연계 특별 프로모션 등을 통한 혜택 확대('24년 800여개 → '25년 1,000여개 업체)
- **(고객관리)** 고객등급제를 통한 지역과 유대 강화 및 재방문 제고
 - 이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등급 부여 및 고객별 맞춤 혜택 제공
-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성과측정)** 고객만족도 및 소비 효과 조사 등 사업 성과 측정, 서비스 모니터링 및 MOT 교육 강화 등 품질 향상